

# 8개월째 못 밝힌 ‘삼바’ 분식 의혹… 표적수사 비판만

(삼성바이오로직스)

檢 “증거 인멸 자체가 문제”  
변호인단 “구체적 근거 요구”  
검찰 조직개편, 장기화 조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사건 분류인 분식회계를 밝히는 데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삼바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열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임직원 측 변호인들은 분식회계가 사실로 인정돼야 증거인멸도 죄가 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분식회계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인멸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선 지난달 26일 진행된 3차 준비기일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국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가 법정에서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증거를 없앤다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삼성 임직원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는지 특정해 달라”며 “검찰은 2000여개 파일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삭제된 파일의 내용과 제목, 관련사건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즉, 검찰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공소사실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삼성 측의 주장에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한 채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인 것.

앞서 검찰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수사가 지난 8개월간 숨 가쁘게 진행됐으나 사건 분류인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해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도 분류인 분식회계 정황이 딱히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로만 수사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김태한 삼바 대표에게 5월 22일 증거인멸 혐의에 이어 지난 7월 16일 분식회계·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재판으로 검찰은 새로운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도 같

은 사유로 구속될 위기를 벗었다.

검찰은 회계사들로부터 “삼성 주문대로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져왔다. 이번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수사의 분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영장 발부가

처음이어서 분식회계 수사가 물꼬를 틀 수 있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인사로 인한 삼바 특수부 교체 시기까지 맞물려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검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로 해당 건을 재배치하고 다른 공판이다. 부장검사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수사를 맡아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도 참여한 그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공판을 담당해 왔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왕정홍 방사청장, 印에 방산협력 확대제안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인도와의 방위산업 분야 협력확대를 위해 인도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왕 청장은 지난 6일 ‘서울안보대화(SDD)’ 및 ‘The CEO’s 포럼’ 참석차 방한한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을 만나, 방산 분야 협력사업 확대 의사를 피력했다.

왕 청장은 양자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왼쪽)이 지난 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으로부터 기념패를 받고 있다./방위사업청

4강국 수준까지 높이는 외교정책이다. Make in India는 인도에 해외기업을 유치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개발 정책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서 제외된다

이공계 요원 ‘일부 축소’  
공정성·형평성 찬반 여전

한류스타로 국익에 기여하는 방탄소년단(BTS)은 병역특례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체육, 클래식 및 무용 등 고전예술 분야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병역특례제도는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최근 찬반논의가 뜨거워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 유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소식통들은 8일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구성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들 병역특례 대상은 매년 30~40명으로, 전체 병력수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부실한 병역관리와, 편입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 TF를 구성해 제도 폐지라는 강경책까지 염두에 둔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병역특례 TF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입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지난 6월 각 지방병무청에 전담 직원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문형철 기자

## 자사고, ‘추가모집’ 놓고 교육청과 신경전

서울시교육청, 모집없는 7곳 미승인  
서울 후기고 입학전형 12월 9일 시작

서울시교육청과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내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 자사고들이 추가모집 여부를 놓고 힘겨투기를 하고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관내 자사고 21곳(하나고 포함) 중 추가모집 계획이 없는 7곳의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이 미승인됐고,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추가모집 계획을 포함한 전형 계획을 다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재지정평가 이후 교육청-자사고 간 깊은 갈등의 골이 고입 수험생들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시교육청은 추가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자사고 7곳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모두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게 된 학교들로 알려졌다.

추가모집은 신입생 정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한 자사고와 외고 등 학교장 선발고가 1월 중 추가로 모집 기간을 정해 신입생을 선발토록 하는 제도다.

자사고는 지난해부터 12월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고 있으나,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일반고에 임의배정되지만, 일반고에 떨어진 학생들은 자사고 등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들은 추가모집을 할 경우 일반고에 탈락한 학생들이 자사고에 입학했다가 학기가 시작되면 애초에 가고자 일반고로 전학하면서 학교 운영이 파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모집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에 지원자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들 자사고들이 내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올해 3월 발표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반드시 추가모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지원자 미달 시 정원을 채우지 않고 남겨둔 뒤 학기 시작 후 일반고에서 우수 학생을 빼 오기 위해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청은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까지 변경해 공고해야 한다. 올해 자사고를 포함해 서울 후기고 입학전형이 12월 9일 시작하므로, 8일까지가 고입전형기본계획변경·공고 마감일만큼 시행령을 어긴 셈이 됐다.

교육청은 그러나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이뤄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사고들에게 추가모집 실시 계획을 담은 입시요강을 9일까지 다시 내도록 했고, 추가모집 계획이 없이 올해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사고들이 추가모집 계획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 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한영외고 학생부 불법유출’ 수사의뢰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다녔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불법 유출됐다고 판단, 곧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학생부를 조회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 EIS·나이스)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 한 교직원인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조회한 1건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조회한 교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

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곧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이 한영외고 보고를 토대로 학교의 학생부 발급 대장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8월 이후 조 후보자 딸이 요청한 1건(8월 21일)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하기 위해 발급한 1건(8월 27일) 등 총 2건만 기록돼 있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협조요청에 따라 나이스 로그 기록 분석 결과를 서울

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 유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 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학생부 유출 논란이 일었다. 주 의원은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공익제보로 확보했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한용수 기자